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안 번호	2299
----------	------

제출년월일 : 2012. 6. 8.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주 문

- 전 세계적인 흐름인 多 가치, 多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외국인 주민수가 급증하여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126만명(전체인구 2.5%)에 달하고, 안산시는 5만명을 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음.(외국인주민수는 2020년 5%, 2050년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 여성부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의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시행을 시행하였음.[예산은 12억원(2006년)에서 629억원(2010년)으로 4년간 52배 증가]
- 반면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건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구성 개요

- 협의회명 :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참여희망 기초지자체 : 21개 시·구(2012. 6. 7일 현재)
- 구성형태 : 협의회(기초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담당 실·과장)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인원구성 : 21개 기초자치단체장(회장 1, 부회장 1, 위원 19)
 - 권 한 : 안전 토의 및 표결권
 - 실무협의회
 - 인원구성 : 21개 기초자치단체 담당 실·과·소장
 - 권 한 : 상정안전에 대한 실무 검토 및 결과 보고(협의회)
- 주요협의사항
 -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추진경과

- '12. 01. 18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필요성 제기
 - ※ 한·일·유럽 다문화공생도시 서미트(도쿄 신주쿠 소재 한국문화원)
 - ※ 일본의 외국인 집주도시 협의회와 유사한 기능
- '12. 05. 04 : 협의회 구성 제안(안산시→대상 시·구)
 - ※ 42개 기초자치단체(외국인 주민수 1만 이상 38개, 기타 4개)
- '12. 08. 08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전 설명
- '12. 05. 18 :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참여 시·구 확정
- '12. 06. 01 :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협의회 개최
 - 협의회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
 - 기본 규약(안) 마련(조직, 기능, 운영, 실무협의회 등)
 - 시(구)의회 동의안 의결 관련 등

□ 향후계획

- '12. 8월 한 : 협의회 참여 시·구 지역의회 의결 및 고시
- '12. 9월 중 :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회 개최
 - ※ 세부계획은 우리시 초안 마련후 참여도시의 의견 수렴 후 확정
- '12. 9월 중 : 협의회 구성 보고(상급기관)
 - ※ 협의회 구성 후 10일 이내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장 2절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협의회규약 : 불 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 임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칭)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5천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의 승인에 의한다.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고, 장을 협의회의 위원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에 둔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부 단체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회의 등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4.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5. 기타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회비 및 분담금 등)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24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계관리) 협의회회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별도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종로구·성동구·강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안산시·수원시·화성시·성남시·부천시·용인시·시흥시·고양시·김포시·포천시·광주시·안양시·남양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

제5조(회비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